



MVPR-2008-02

VIP REPORT

2008. 1. 18.

■ 새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안보 정책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홍순직, 주원, 이부형, 허만울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030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02-3669-418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새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안보 정책

Executive Summary	i
I. 실용주의 외교·안보 정책 개관	1
II. 비핵 개방 3000 정책	6
III. 한미 동맹 복구	9
IV. 신아세아 협력 외교	12
V. 글로벌 에너지 외교	14
VI. 한국형 선진 기여 외교	15
< 토론 >	17
■ HRI 경제 지표	31

새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안보 정책

□ 실용주의 외교·안보 정책 개관

- 실용주의 외교 : ‘자주’나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이념의 반대 개념으로 자유민주주의, 인권 존중, 시장경제원칙의 가치 위에 국익 증진을 추구하는 외교
 - 외교에 따른 행동은 신축성과 유연성을 견지하되 경제적 콘텐츠를 중시

□ 비핵 개방 3000 정책

- 기본 철학 : 남한에서는 경제 협력, 북한에서는 평화 협력을 하는 호혜적 남북 협력 관계 구축
 -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문제도 상호주의 철학인 Give & Take 원칙에 의함
- 내용 :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1인당 주민 소득이 3,000 달러가 되도록 지원
 - 남한과 국제적 지원을 통해 4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연 13~14%씩 10년 동안 성장 지원
 - 북한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300만 달러 이상 수출 기업을 100개 이상 만들 수 있도록 돕고, 30만 명의 산업 인력 양성 교육에 투자

□ 한미 동맹 복구

- 21세기 한미 신동맹 추진 : 한반도 안보 이외에도 21세기 인간 안보에 대한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새로운 협력 관계 구축

□ 신아세아 협력 외교

- 연성강국의 이미지 : 한류를 통한 문화 콘텐츠, 스포츠 강국의 힘, IT기술력, 재난 지역에 신속히 기여하는 인도주의 외교를 통한 이미지 구축

□ 글로벌 에너지 외교

- 에너지 주도권 확보 : 러시아 유전 개발과 파이프 라인 연결을 통해 석유를 가져와 남한에 대규모 유전 시설을 세워 국제 거래를 하는 ‘석유 현물 시장’으로 에너지 주도권 확보
 - 민간의 해외 유전 개발 지원, 한반도-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중동을 잇는 에너지 실크로드 구상 및 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 한국형 선진 기여 외교

- 핵심 가치 : 더 푸르른 세계, 더 안전한 세계, 모두 함께 노력하는 세계 건설
- 내용 : 한국의 국민 총소득 대비 0.06% 수준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정부 개발 원조) 재원을 0.7%로 상향, PKO(국제연합군) 5,000명 확보, 해상 수송로 보호를 위한 해상 합동 군사 훈련 참가, 한국형 새마을 센터와 IT 서비스 센터 및 e-Learning 센터 설립, 후진국 연간 3,000명 국내 연수 추진 등

새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안보 정책

- 출처 : 21세기 동북아미래포럼
- 일시 : 2008년 1월 10일
- 연사 :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
- 주최 : 중앙일보,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제 발표

I. 실용주의 외교·안보 정책 개관

이명박 당선인은 이명박 외교·안보 정책을 실용주의 외교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용주의가 무엇이나, 무엇인데 실용주의나, 실용주의라는 것은 원칙을 도외시하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 중국 실용주의 정책의 성과

제가 신문을 보니까 중국에서 실용주의 정책이 생겨난 것은 문화 혁명 이후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비교해 보니까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문화 혁명이 1966년도에 시작되어 1978년에 끝나기를 12월 18일 ~ 22일간의 공산당 11기 3차 전체 회의에

서 있었는데 한국의 선거가 2007년 12월 19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명박 당선인께서 나와서 나는 앞으로 실용주의 정책을 취하겠다고 했는데 비슷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떤 대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공산당 11기 3차 전체 회의에서 문화 대혁명 중 좌경적 착오에 관해서 논한다는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모택동이 내린 지시와 결정은 항상 옳다는 양개범 시론(兩個凡是論)은 잘못됐다는 것이었고, 모든 진리를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실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쥐를 잡는 데도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된다는 뜻의 흑묘백묘론(黑貓白貓論), 또 산을 오르는 데는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산만 오르면 된다는 뜻의 남파북파론(南坡北坡論) 등이 소위 실용주의 논쟁의 무기로 나왔습니다.

당시는 이념 논쟁이 대단해서 군인들도 싸움은 없으니까 훈련하지 않고 전부 모여서 이념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차는 제 시간에 안 오고 기차 기다리는 사람은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데 웃은 누더기처럼 입고 배는 고프고 이런 상황인 것이 중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소평 씨가 실권을 잡고 앞으로 열차는 제 시간에 운행하라, 군인들은 훈련을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주어진 생업에 전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당에서 지시하는 바를 따르면 배 부르고 등 따습게 해 주고 소득을 두 배 올려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소위 실용주의 중국의 노선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나 하는 것은 지금 중국에 가 보시면 알 것입니다.

골프를 치러 청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청도에 가는 비행기가 하루에 11편이 있습니다. 왕복이 20만 원 정도 됩니다. 청도에서 세상을 둘러보니까 한국이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할 정도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상해의 2/3 정도의 규모인데 모든 것이 상해와 같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음식 좋고 그래서 실용주의 정책이 정말 괜찮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과거 10년 정권의 대북 정책

지금 한국에서 제가 국내 정치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교로 볼 때는 과거 10년을 일반적으로 좌파 정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좌파 정권이 맞느냐는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지난 번 두 정권에 대해서 정 장관이 계셔서 반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음의 기준으로 좌파 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국의 판단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좌경이라고 보는 것이 김정일 정권인데 김정일 정권이 이야기하는 것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지난 두 정부였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이라는 것을 시행해서 햇볕을 쬐이면 상대방이 옷을 벗지 않겠느냐 했는데 결과는 햇볕을 주는 쪽만 많이 바뀌고 받는 쪽은 별로 옷을 안 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뭐가 다른가 하면 핵 문제가 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일하고 조용한 가운데 햇볕을 쬐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 있어서는 북한이 핵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방적으로 주는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좌파 정권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코리아 파운데이션과 재외동포 재단

저는 다른 내용은 모르겠지만 외무부가 관련된 기관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코리아 파운데이션이고 하나는 재외 동포 재단인데 코리아 파운데이션을 만든 게 사실 90%를 제가 했습니다. 법도 만들고,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예산도 따고 심지어 정관까지 제 손으로 다 썼습니다. 동포 재단도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김영삼 대통령과 이야기해서 전부 다 제가 예산까지 짰는데 균형 정책이라고 해서 지역 균형을 위해서 이 두 기구를 제주도로 보냈더라고요. 아직 제주도로 옮겨가지 않았지만 물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문화 혁명 때 결정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문화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기관이고 돈이 3천 억이나 쌓였습니다. 여권이나 해외 여행할 때 조금씩 받아서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수출과 경제적인 진출을 밑바탕 할 수 있는 문화적인 밑바탕을 주려는 것인데 이걸 제주도로 갖다 놓아서 일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재외 동포들이 지금 700만 명이 있고, 한국 사람들이 기가 세고 머리가 좋고 진출력이 좋아서 어디든지 가면 상층에서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재외 한국 교민 700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국내와 링크를 맺는 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동포 재단을 제주도에 가져다 놓는 결정은 유사성을 찾아본다면 문화 혁명 때 결정과 비슷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잘못된 원칙과 잘못된 관념에 일관해서 뭘 추진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실용주의다 하는 것은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 이것은 도움이 안 되겠

나 해서 실용주의 외교라는 것이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실용주의 외교란 무엇인가?

실용주의라는 게 무엇이나? 이것은 말하자면 ‘자주’나 ‘우리 민족끼리의 공조’와 같은 소위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털어버리고 외교를 국가의 안보나 경제 이익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익에 기초한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굳건한 원칙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존중과 같은 원칙과 가치관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기초하여 실질적인 국익을 추구하는 데 원칙은 분명하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대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실용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교 정책에 있어서 경제적인 콘텐츠를 넣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을 도와주는 데에 있어서도 도와주려면 국내 여론이 뒷받침되어야 하니까 국가적인 컨센서스에 입각해서 북한을 도와줘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정파나 정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한다는 내용들이 실용주의 외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외교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외교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니까 국민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국익에 따라 추진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II. 비핵 개방 3000 정책

실용주의 외교 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소위 비핵 개방 3000 정책입니다. 비핵 개방 3000이라는 것은 북한의 1인당 주민 소득을 3천 달러까지 이루는 데 있어서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하되, 북한 핵이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핵을 먼저 해결하는 데 상당한 역점을 둡니다. 북한 핵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적인 지원은 몇 발자국도 더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북핵 폐기가 전제

지금 현 노무현정부가 하는 정책은 무엇이나 하면 선순환적인 정책이라고 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핵 문제 좀 해결하자고 해서 몇 발자국 오면 우리가 또 조금 하고 저쪽에서 몇 발자국 들어오고 해서 순환적으로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핵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취한다는 것이며, 핵이 있어서는 안되고 핵은 확실히 포기한다는 전제하에서 핵 폐기가 이루어지고 비핵화가 되면 우리가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논의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논의는 여러 가지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일찍 시작할 수 있고 실질적인 지원도 이쪽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이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미사일 문제도 있고 대량 살상 무기와 기타 화학 무기 문제도 있습니다. 기본은 무엇이나 하면 남쪽에서 가진 것은 경제적인 힘이고, 북쪽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평화에 호응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경제 협력을 하고, 북쪽에서는 평화 협력을 해서 양자 관계가 단계적으로(Step by Step) 호혜적인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인권에 관한 문제는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비핵 개방 3000은 10년간 북한의 1인당 주민 소득을 3천 달러까지 올려주는 것인데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북한의 눈치를 봐서 인권 문제는 자극적이니까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우리가 경제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미국을 위시해서 선진국의 인권 개선에 대한 압력을 받아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경제지원을 하면서 인권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때는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고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비핵화를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도 남북 공조에 의거한다는 것 보다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의 국제 공조를 중요시하겠다는 것입니다.

■ 북한 민간 경제 활성화 전략

경제 협력을 할 때 이것은 북한의 체제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을 올리고 북한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금을 주고 저쪽에서 마음대로 처분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결국은 힘이 제일 센 군부에 가져갈 것이고, 군부에 가면 무기를 살 것이고, 무기를 사면 거꾸로 우리에게 대한 안보 부담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 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에 돈이 들어가야 그것이 투자가 되어서 경제가 커 나온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성장하려면 역시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민간 경제 쪽으로 우리의 지원이 주력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지원은 수출 산업, 그리고 북한의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데 우선 투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을 100개 이상 만든다든가, 30만 명의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에 우리가 투자한다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의

자본뿐 아니라 국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400억 달러에 해당되는 돈을 10년간 타겟팅을 잘해서 투자한다면 1인당 주민 소득 3천 달러로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 1인당 주민 소득 3,000 달러

3천 달러가 왜 3천 달러이나 하면 우리가 아시안 게임 할 때 한국의 소득 수준이 1인당 3천 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집에 냉장고 정도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면서 3천 달러 정도 되면 그때는 자기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경제는 3천 달러까지는 우리가 도와서 올려주지만 북한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북한 자생의 힘으로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야 궁극적으로 통일을 할 때 소득의 격차를 방지하고 아주 격돌적인, 충격적인 통일을 피할 수 있고 좀 순조로운 조화로운 통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천 달러까지 도와주려면 연평균 경제성장률 13~14%를 가지고 10년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북한의 체제에 대해 신뢰를 갖고 밀어준다는 것도 모토가 된 것입니다.

■ 국군 포로, 남북자 송환 문제

국군 포로의 송환이라든가 남북자의 송환 문제도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안별(Case by Case)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동족이니까 무조건 일방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자생적으로 커 나오도록 우리가 도와주지만 단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당신네들도 무엇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는 데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호간에 신뢰가 구성이 되고 도와주기에 더 도움이 된다는 남북한 간 Give & Take의 정신을 강조한다는 것이 비핵 개방 3000 정책의 아이디어이고, 철학입니다.

III. 한미 동맹 복구

■ 공동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협력 관계

한미 관계를 본다면 그 동안에 동맹은 형체는 남았지만 내용이 많이 변질되어서 신뢰가 저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든지, 북한의 위협은 중요한 위협이 아니고 우리가 자주를 해야 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미군은 통일이나 자주에 방해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북한이 주적이 아니면 미군은 한반도에 무엇 때문에 있느냐 라는 의문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은 방어용이라고 한다면 방어용은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핵을 폐쇄하고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이유가 상당히 상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것은 공동의 목표(Common Goal)가 있고, 공동 아젠다가 있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코드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장에 나가서 싸울 때 동료간에 나는 적진으로 들어갈 테니까 너는 뒤에서 엄호 사격을 해라 그러면 내 생명을 내 동료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관학교에 가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Yes, sir', 'No, sir', 'I don't understand, sir'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명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알고 모른다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치는 데 컨닝을 한다든지 그러면 퇴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동료에 대해서 엄호할테니 너 먼저 뛰어가라 하고 생명을 걸고 갔는데 나는 그 사람을

속인다면 그 사람이 날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맹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신뢰인데 목적이 다르고 중간에 코드가 다르면 동맹이라는 형체만 있었지 내용은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그런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단지 양적인 노력을 해서는 한미 동맹이 복원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21세기 한미 신동맹 추진

서로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소위 협력관계를 만들려면 대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북한 정책에 대해서 서로가 신뢰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신뢰 기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 교환입니다. 북한에 대한 공동 보조와 정보 교환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슈퍼 파워가 되어서 꼭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 적대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고 세계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 있어서도 꼭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있는 것보다는 동북아 전체 안정을 기하는 것,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호응해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한다는 새 목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미국의 과제 중에서 중요한 과제는 21세기형 인간 안보에 관한 기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러를 퇴치한다든가 대량 살상 무기를 방지한다든가 환경 오염에 대응한다든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노력한다든가 이런 소위 21세기

형 국제적인 안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파트너로써 같이 기여하고 협조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동맹이라고 해서 꼭 군사적인 안보적인 면에만 집중하는 것 보다는 좀 더 경제 사회적인 지지를 붙여서 광범위한 유대관계를 만든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FTA도 체결하고 미국에서 비자를 면제해주면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호응해서 관계를 증진해야 합니다. 또 200만 명이나 되는 우리 교포에 대한 관계도 고려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과거에 한미 관계의 호시절(Fine Moment)에 대해 기억이 없는 젊은 사람들을 서로 왕복시키고 이해를 증진하고 교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간의 교류가 한미동맹에 새로이 필요하고, 이러한 목표와 방향을 재정립 해서 하나의 명시된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앞으로 21세기 신동맹 선언을 준비해서 선언하자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선거 기간에 명확히 발표되고 거기에 대한 반론도 듣고 토론도 해서 우리 국민의 의식 속에 정착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난 선거기간은 BBK로 개인 윤리적인 문제가 너무 전면에 나서서 안보 문제를 토의할 기간이 적었습니다. 특히 또 국내 아젠다 중에 경제가 압도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안보나 외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적었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외교 정책은 골격은 MB 독트린이라고 어느 정도 발표는 되었지만 그 세부 형체가 잡히는 데는 아직 미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IV. 신아세아 협력 외교

외교의 콘텐츠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너무 한반도, 동북아 안보와 동북아 문제에 국한되었는데 지금은 외교의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 세계로 넓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선 전면적인 아세아에 넓히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신아세아 협력 외교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일본과의 관계도 새로이 복구하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정립하고, 인도와의 관계, 그리고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관계 심지어 호주와의 관계와 같은 쌍무 관계를 더욱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아세아 공동체 외교로 끌고 이런 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보 문제에 있어서 6자 회담 이후에 동아시아 협력 안보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 현재 아이디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밀고 가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세아 전체 경제적인 공동체로 가는 데 있어서 한국은 어떠한 이미지를 들고 갈 것이냐는 것을 논의해야겠다는 것입니다.

■ 연성강국의 이미지

지금 잠정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연성강국(Soft Strong Power)의 이미지를 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성강국 이미지는 무엇이나 하면, 한류를 주류로 하는 문화 콘텐츠를 아시아에 많이 전파시키고 스포츠를 통해서 한국이 상당히 스포츠를 좋아하는 나라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안 게임에서도 보면 인구로 봐서는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적은 데 메달 수로는 2등을 했습니다.

항상 일본을 능가했고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스포츠 강국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으니까 이것은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가 보니까 스포츠라는 것이 인간 교류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 사람 참 인품이 좋은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 개인을 최고로 평가합니다. 영국에 가서 3년 지나보니까 'He likes humor, He likes sports'라고 하면 그 사람이 최고라는 말이 됩니다. 스포츠라는 것이 민간 외교에서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IT가 발전되어 있으니까 IT와 BT를 통해서 첨단 과학 기술을 가진 앞서가는 나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역에 재난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와서 도와주는 착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볼 때 박력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나라, 지구촌 어디에도 호감을 주는 나라, 문화적인 공간과 창의력이 있는 그런 나라라는 이런 인상을 주자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인의 폭발적인 해외 여행을 통해서 한국은 상당히 Ugly Korean 이미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정부나 민간이 협력해서 빨리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력의 증강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나쁜 인상을 같이 끌고 간다면 이것을 불식시키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콘텐츠는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V. 글로벌 에너지 외교

지금 중국 13억의 인구가 연간 성장률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인도가 갑자기 산업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에너지를 전부다 흡수해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값도 비싸고, 앞으로 에너지 고갈 상태가 곧 올 것입니다. 그러면 에너지의 사용에 있어서 세계 톱 10위에 들어가는 한국이 에너지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갖고 있지 않는다면 어느 단계에 가서는 우리 경제가 질식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에너지에 대해서 각별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유전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파이프 라인을 가져와서 남쪽에 대규모의 유전 시설을 만들어서 현물 시장을 아시아에서 갖자는 생각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파이프 라인을 끌고 와서 한국에 현물 시장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면서 에너지에 대한 주도권을 잡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우리 민간의 유전 개발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동시베리아에 대한 유전 개발을 통해서 에너지를 가져오는 실크로드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중동을 잇는 에너지 실크로드를 확고히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할테니 태양열이나 풍력 등 소위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국제 협력을 증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에서 2020년이 될 때 에너지 부족현상으로 다시 위기를 갖는 일은 없게 하자는 것이 MB 독트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VI. 한국형 선진 기여 외교

한국은 지금 세계 7대 강국으로 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데 선진국에 갔을 때는 세계 후진국에 대한 기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한국형의 선진 기여 외교를 열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순 물량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국이 줄 수 있는 한국의 위상에 맞고 능력에 맞는 기여 외교를 하자 해서 만들어 낸 게 더 푸르른 세계, 더 안전한 세계, 그리고 함께 노력하는 세계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기여를 하는데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정부 개발 원조)는 지금 현재 GNI(국민총소득)의 0.06% 수준인데 이를 UN 권장 수준인 0.7%로 가는 길목을 빨리 구축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또 국제적으로 PKO(Peace Keeping Operations : 국제연합군)에 최소한 연 5천 명 정도는 보낼 수 있는 여력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만들고 군대도 항상 훈련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필요하다 하면 우리 PKO를 보낼 수 있는 5천 명의 인적 자원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교육을 하는 데 한국형에 맞는 새마을 센터, IT 서비스 센터, e-Learning 센터를 만들고 연간 3천 명의 해외 인원을 한국에서 연수할 수 있는 자원과 시설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또 에너지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해상 루트에 관한 안전 훈련에도 참가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위 선진 기여 외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것은 앞에 신 아세아 외교에서 밝혔시피 IT, 스포츠, 한류에 대한 예술적인 것을 전부 쉬워 기본적으로는 남이 어려울 때는 한국은 가서 도와주는 좋은 나라라는 괜찮은 이미지를 구축하자는 것이 소위 MB 외교 독트린에 들어가 있는 골자입니다. 다분히 많은 내용이 그냥 학자들이 한 40 명 모여서 논의해서 이런 것이 좋다, 한번 밝히자 해서 신문기자 회견 한번 하고 그 뒤에 큰 토론이 없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명박 당선인께서 취임하고 나면 개발할 수 있는 소위 외교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 각계각처에서 기여도 하고 비판도 하고 토론도 해서 가닥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대개 이러한 것이 지금 이명박 당선인께서 말하자면 나가려고 하는 방향인데 이분은 압도적으로 경제 위주입니다. 그런데 외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주 쉽게 말해서 '북한은 좀 도와줘야겠다. 그런데 고맙다고 해야 되고 자기들도 뭘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군은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국입장에서 볼 때 꼭 3만 의 인원을 대한민국에 오래 두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떠날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과거의 미국이 아니고 미국의 안보 정책이 과거의 안보 정책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가끔 한국을 달아나려고 하는 동맹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제가 볼 때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동맹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당선인은 '좋은 싫은 미국은 잡고 있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다릅니다. '일본은 자기들이 좋게 하면 나도 좋게 하는 것이고 중국도 자기들이 좋게 하면 좋은 것이고 우리를 무시하면 나도 할 소리를 하겠다' 그런 자세입니다.

그리고 외교는 너무 한반도 남북한에 치중 하지 말고 세계적으로 확대해서 넓은 지평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 대개 기본 아이디어지만 지금은 경제 살리는 데 주력하고 있고 외교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말하자면 그림의 점선으로 스케치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문을 어디에 달고 출구는 어디에 넣고 조경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할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정세현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 토론하기가 좀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 반 이상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으로 유종하 전 장관을 모셨었기 때문입니다. 유 장관은 대학 선배 되시기 때문에 아랫사람으로 여러 가지 편리하고 좋은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실 때도 유 장관과 심각한 견해 차이가 있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 붕괴 문제입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유 장관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어서 제가 좀 힘들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아랫사람이니까 붕괴하는 걸로 해서 작업도 했는데 지금 붕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대외와 관련해서 현장 감각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따라갈 수가 없지만 북한과 관련해서는 역시 다른 측면이 많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 화살표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과거 10년 정권이 좌파냐 아니냐를 가지고는 제가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이데올로기적인 구분인데, 탈이데올로기 세대가 지금 인구의 60~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시각이 고정되어 있는 연령대에서 보면 분명히 젊은 애들은 전부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탈이데올로기 내지는 분배 문제와 관련해서 평등 쪽으로 요구하는 것이 높아질 것입니다. 북쪽과 관련해서도 북을 적대시해야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은 자꾸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논쟁해 봐야 소용도 없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더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핵이 없었기 때문에 햇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핵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북한을 상대로 해서 대북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핵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2006년 10월 9일입니다. 그전에 핵 물질이 있었지만 그것이 소위 무기가 있다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 했었으니까 2006년 10월 9일 핵실험 이후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단순하게 퍼주기라는 식의 대북 지원은 현실적으로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정부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잘못하면 노무현 정부가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고 있고 미움을 받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객관적인 사실 관계까지도 대충 간단하게 정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실용주의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진보라고 하기도 그렇고 보수라고 하기도 그렇고 결국 그래서 그걸 다 아우를 수 있는 표현으로 실용주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사구시라는 단어는 쓰지 않으셨는데 문화 혁명 이후에 중국에서 등소평이 한 것이 바로 실사구시입니다. 그리고 실사구시 입장에서 비판 받은 것이 바로 양개범시론입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쪽편도 됐다 저쪽편도 되는 그러면서 눈치를 보는, 소위 양개범시, 범시파라는 것은 눈치를 보는 파입니다. 범시를 교정하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 등소평의 실사구시론이고, 흑묘 백묘론이고, 남파북파론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실용주의라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고 그 실용주의는 분명히 범시론에 대한 대체개념으로 나온 건데 그런 관계를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기회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리 가고 저럴 때는 저리 가고 그것은 정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실용주의라는 것이 확실한 이론적 토대 없이 그때그때 적절하게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잘못하면 기회주의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 문제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비핵 개방 3000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핵을 폐기해야만 경험도 하겠다는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얼마나 잡고 계시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1990년에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 남북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이라는 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문제가 1993년에 NPT(Nonproliferation Treaty : 핵확산 방지 조약) 탈퇴로 연결이 되고, 1994년 10월 20일 제네바 합의가 체결되면서 북핵 문제는 조금 주춤했지만 그 당시 국제 정치 이슈에서는 사라졌습니다. KEDO(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통해서 원자로를 지어주는 것으로 해서 핵 문제가 해결된 걸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여름 볼튼이 여기에 와서 난데없이 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핵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2002년 대두된 핵 문제라는 것이 실체가 있었던 것인지 말하자면 HEU(High Enriched Uranium :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실체가 있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든지 토론을 해야 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핵을 폐기했다는 판단을 내리는 데 상당히 필요한 핵심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핵 폐기에 몇 년이나 걸린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1990년에 제기된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17년 이상을 끌고 있는데 1~2년 안에 끝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계속 이 문제가 지지부진하고 미해결 상태로 있으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갈 수 있다고도 보는데 비핵을 전제로 하는 경우 남북 관계는 어느 선에서 조율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개방 문제입니다. 비핵 개방 3000에서는 개방을 결과로써 전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입구론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개방 개혁은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구론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개방 개혁은 북한 체제가 변화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대체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방 개혁을 통해서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경제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회 문화 변화가 그 다음에 뒤따릅니다. 그것이 결국 중국에서 자본가를 공산당 당원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사유 재산 제도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사유 재산법을 만드는 것 같은 정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정치 변화가 일어난 이후에야 비로소 군사적인 변화가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 관련해서 보면 중국이나 북한에서 경제적인 변화나 사회 문화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외신을 인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북한 형법이 1999년 9월에 개정이 됐는데 2004년 4월 29일에 4년 반 만에 재개정된 형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북한 사회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긴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개방 중에 있는 것을 알고 개방 연후에 3,000 달러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 군사 변화까지 일어나야만 개방이라고 전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비핵 이후에 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김영삼 대통령 정부 초기에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뒤에 남북 대화가 끊어져버리고 그래서 5년 내내 통미봉남(通美封南)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3년 8개월이나 통일 비서관 하면서도 통일부 일도 없었고 통일 비서관 일도 없어서 제때 퇴근할 정도로 별로 바쁘지 못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은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선된 그날 저녁에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당선자께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핵을 폐기하도록 설득해 나가겠다.

그런데 그 설득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맨 입으로 되느냐 남북간에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설득이 되는 것이지, 또 신뢰라는 것은 일종의 우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무턱대고 이것이 옳은 방향이니까

너 자세 고치라는 식으로 훈계조로 이야기해서 설득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호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앞으로 잘해 줄게 하는 정도를 가지고 우호 관계가 형성이 되겠는지, 현실적으로 외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평화 협력과 경제 협력을 맞바꾸는 아이디어는 원래 기본이지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어떤 점에서는 대북 경제 협력의 수준에 걸 맞는 남북간의 평화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Step by Step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올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데 북한이라는 특수한 집단이 쉽게 이렇게 호응이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북한의 경제 수준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엄격한 상호주의가 적용되기 힘듭니다.

제나라 재상을 했던 관중의 말 중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름실즉지예절 의식즉즉지영욕(倉凜實則知禮節 衣食足則知榮辱)' 즉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족해야 영욕을 안다는 것입니다. 의복과 먹는 것이 만족된 이후에야 사람은 부끄러운 줄도 알고 예절도 안다는 것입니다.

경제를 조금 주고 평화에 협조하라는 것은 사실 도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의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북한은 아직 기계적 상호주의,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예절이라든가 영욕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대라고 봅니다. 그런데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실태 파악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인권 문제는 언제든지 제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인권 문제는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권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 단체로 하여금 인권 문제를 제기하도록 해서 북한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자연스럽게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켜 나갈 것인지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중국의 인권 문제가 개선되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까 선례를 말

씀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는 부시 정부 시대로 기억하는데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나고 난 후 2년 반 정도의 소위 치리 정돈 시기가 있었습니다.

치리 정돈 시기를 거친 이후에 등소평의 남순강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면서 바로 인권 문제를 미국이 제기하였습니다. 수출해서 먹고 살고 싶으면 인권을 고쳐라, 인권 문제를 개선해 나가면 소위 최혜국대우(MFN)를 적용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관세를 많이 물고 들어와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중국이 인권을 개선해 나갑니다.

이것은 제기할 만한 시기의 문제입니다. 인권 문제는 프랑스 대혁명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에도 물론 이야기가 나왔고 유엔 헌장에도 나왔고 인권 문제가 제기된 것은 거의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국에서 인권이 개선된 것이 몇 년만인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20여 년밖에 안됩니다.

적어도 1980년 당시 가격으로 우리가 1인당 국민 소득이 1,508 달러였을 것입니다. 1960~1970년 경제 개발을 통해서 1인당 국민 소득이 세 자리 숫자까지 올라왔을 때 이른바 중산층이 생겨나면서 그들이 정치적인 자유를 요구하고 권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1980년대 인권이 개선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1960~1970년대에도 관념적으로 있었지만 그것이 현실상으로는 되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해서 인권 문제를 그냥 원론적인 차원에서 제기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국제 사회로부터 인권 개선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소위 레버리지를 물었을 때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렇게 그냥 제기하는 것이 차기 5년 이내에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물론 1인당 국민 소득 3,000 달러가 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국은행이 북한 1인당 주민 소득을 1,018 달러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북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거품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재작년 베트남의 1인당 국민 소득이 540 달러인데 북한이 베트남보

다 훨씬 못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018 달러냐, 거기에 합정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숫자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한국의 가격 체계를 적용해서 북한의 1인당 주민 소득을 계산하는 바람에 그게 1,018 달러로 올라간 것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 이야기는 3분의 1로 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50 달러 정도 됩니다.

북한의 1인당 주민 소득을 지금 이 시각 얼마로 계산하고 앞으로 10년 동안에 3,000 달러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출발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틀리면 수정해야지요. 현재 350 달러라고 할 것 같으면 10년 후에 매년 13% 올라가서 복리로 계산하면 한 2,000 달러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의 복지 향상을 시키는 쪽으로 대북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북한 당국을 통하지 않고 그쪽에다가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겠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창구는 당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고난 뒤에 이것은 이렇게 써라 하는 투명성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투명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6. 25 후에 Food for Work 방식으로 지원할 때는 우리는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은 소위 민족사적 정통성이나 통일 문제를 놓고 우리와 끝까지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말을 고분고분 들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Food for Work 방식으로 북한에 대북 지원을 한다면 중국이 이미 썼을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나라 보다 훨씬 더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도 할 수 없었던 것인데 이것도 밖에서 생각할 때는 될 것 같지만 막상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는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미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군 포로 문제와 납북자 문제를 경제 지원 방식으로 상호주의로 풀어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해 봤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더 많은 걸 줄 테니까 국군 포로를 돌려보내라 더 많이 줄

테니까 납북자를 돌려보내라 한다면 글썄 그것은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8명 정도의 일본인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가족들이 40여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흔적이 안 남습니다. 그런데 480명이 넘는 납북자와 역시 비슷한 숫자의 생존 국군 포로들이 여기에 돌아온다면 손자까지 다 와야 하는데 사회 해체 효과가 나 버릴 것입니다. 외국으로 간다면 모르겠지만 남쪽으로 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당국이 여기에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겠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 이후에 이 문제를 광의의 이산가족 개념으로 해서 흔적 없이 하자 했는데 저쪽이 감질나게 한 번에 한두 명 정도 밖에 안 보내줍니다.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자기 내부적으로 건드렸을 때 생기는 정치 사회적 부작용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대북 인도적 지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한다면 진도가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좋은 발표, 좋은 커멘트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10년 정도 구체적인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대북 관계에 평화나 포용을 해 나가야겠지만 앞의 정부들이 제가 보기에는 물론 북한을 끌어들이는 때는 여러 가지 유인이 있어야겠지만 주도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상대방한테 준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저쪽이 경제 규모가 우리의 1/40~1/50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저쪽이 더 궁하니까 결국 우리가 주도권을 갖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온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에서 인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김영삼 정부 초기 때 저희

외교 목표 다섯 개 중에 하나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었고, 거기에 인권 외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년 동안 인권 외교가 없었는데 아마 북한에 대한 배려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근에 시민 단체들이 제기해 가지고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기권한다든지 어떤 경우에 핵 개발하니까 찬성했다가 다시 기권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 외교의 일관성이랄까 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개념을 우리 외교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국제 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인권이란 물론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북한이 당장 들을 리 없지요. 그러나 12월 20일 이명박 당선자가 신문 기자 회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문명사적 전환기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에 충실하겠다는 것은 인권을 이야기한 것이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겠다는 것은 저는 대 찬성입니다.

그것은 옛날 2차 대전 이전에 국가 주권이 절대적이고 따라서 인권은 건드릴 수 없다는 식의 발상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되고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당장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야기를 해 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덕 세종연구소 소장)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한미 관계, 남북 관계를 놓고 볼 때 미국한테 해 줄 것 다 해 주고 한미 관계를 굉장히 잘 못해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무현 정부 쪽 사람들은 결국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이 실패해서 지금은 우리가 추구한 것과 같은 똑같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미국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미국 생각이 다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아까 그 둘 상반된 비판과 항변을 놓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정태 안동대마방직 회장) 오늘 두 분 말씀 감명 깊게 들었는데 저희가 평양에서 보면 사실은 북한이 가진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생각을 가진 걸 느끼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핵시설은 그 사람들이 언젠가 미국이나 남쪽의 여러 가지 관계로 포기하든지 내 놓을 수 있더라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을 포기한다는 생각은 저는 받지 못합니다. 물론 제가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새 정부에서 만약에 북한이 만들어 놓은 핵을 포기 안 했을 때 그러면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라고 싶은 것은 그 동안에 김대중 정부나 김영삼 정부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또 그 이전에 지금 남북 교류가 시작된 지 20년입니다. 노태우 대통령부터 김영삼 정부 20년이 지나왔는데 20년이 지나도록 남북관계에 대해서 정말 큰 차원에서 기초 마련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권이 바뀐 걸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의 안정된 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TV에 나들섬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게 뭘니까? 개성공단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제대로 자리 못 잡고 있는데 또 나들섬에 800만 평 공장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것 보다는 합리적이고 장기적이고 국익에 보탬이 되는 올바른 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종하 전 외무부장관) 저는 청와대 2년 몇 개월, 그리고 나와서 1년 반 유엔 대사할 때부터 핵 문제가 나왔는데 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을 만들어봤자 외부의 수혈 없이는 절대로 유지 못합니다. 제가 1987년~1990년까지 EU 대사를 하고 벨기에에 앉아 가지고 페레스트로이카에서부터 장벽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는데 인간의 역사는 경우에 따라서 강물과 같이 빨리 흐를 때도 있고 적게 흐를 때도 있고 폭포처럼 내려갈 때도 있지만 물이 흐르는 것이 통로를 막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도저히 안 되고 주변이 안 되고 또 세계 정세가 바뀌는데 여름이 오는 데 겨울 옷 입고 털 모자 쓰고 못

지냅니다. 1~2개월은 지내지만 4년, 5년은 못 지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막판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털옷입고 지나는데 땀이 뻘뻘 나면 쓰러지거나 옷을 완전히 벗습니다.

그러니까 장벽을 쌓고 했지만 인위적인 것입니다. 어느 한 순간 장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피난민이 헝가리로 돌아오니까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생각보다 빨리 통일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도 맞지 않는 체제에서 오래 지나다가 무너질 때는 1~2년 내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60년 지났는데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다 북한한테 핵은 가지지 말라고 하거든요. 북한이 살 길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부족한 것은 방법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북한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4자 회담을 주장했는데 미국 사람도 4자 회담 제의해서 되겠느냐 중국에서도 참석도 안 하겠다 북한이 안 올 것이다 그런데 저는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한계 선상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원조를 준다면 4자 회담에 나온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4자 회담에 나올 줄 알고 제의한 것은 아닙니다.

4자 회담을 제의해서, 제의한 것도 평화적인 제의이고 받으면 더욱 좋고 했는데 결국 4자 회담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게 없으니까 받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강대국들이 한국을 포함해서 북한 핵은 곤란하다고 결의를 가지고 하면 북한은 내 놓습니다.

그 대신에 북한의 몰락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제 발로 서는 걸 원한다, 어떻게 서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하면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의외로 핵이 빨리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철학으로 봐서 북한이 핵무기 만들어서 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주자 더 주자고 해서 그 정권을 오래 유지하고 키워주면 북한도 제대로 못 서고 핵에 대한 위협만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라는 방법에 달렸지만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미국이 핵 폐기를 추진하고 일본, 한국, 중국이 달려들면 됩니다. 중국이 지금 가담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혹시 넘어질까 봐 그렇습니다. 넘어지면 많은 피난민이 나오고 중국이 곤란하게 될까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살살 달래고 어느 단계에 가서는 미국이 중국한테 대해서 꼭 한번 봐 주십시오 하면 생색내고 봐 주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핵 문제는 해결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게 다 믿는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몰락시킨다고 했지 북한과 교섭하려고 안 했습니다.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했는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어렵고 최소한도 앞으로 4년~6년간은 미국이 중동에 매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가능하다 하니까 북한과 돈 주고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미국이 선회를 했지만 선회를 했던 안 했던 간에 미국의 정책은 북한의 핵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같이 예측불허의 정권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넘어지느냐 잘 되느냐 라는 것은 2차적인 것이고 전세계적인 추세와 정책이 북한과 같은 나라가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미국이 정권의 몰락을 주장하다가 갑자기 선회해서 했기 때문에 중간에 시간의 손실을 가져왔고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늦었든 빨랐든 간에 북한의 핵은 안 된다는 입장은 분명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북한의 핵을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적인 문제나 지원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핵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사람이 굶어죽거나 전염병이 오는 것은 도와줘야합니다. 그것은 정치 이전에 인도적인 문제이고 이명박 당선인도 인도적인 지원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쓰러지지 않게 먹이는 거지요.

그러나 기본적인 자원을 몇 십억 달러, 몇 백억 달러를 내서 북한을 제대로

살린다는 것은 핵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는 확고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외의 문제들은 다 지엽적, 외교적인 것이고 기술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데 이것 놓으면 우리는 망하고 완전히 맨손인데 놓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시지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북한이 핵을 내 던져도 지금 세균 무기, 화학 무기,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다음 것을 가지고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북한의 의지를 못 본다는 측면이 아니고 미국을 위시한 이쪽 세계의 의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절대로 북한에서 핵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곽재원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소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점선을 그리고 계신데 앞으로 점선이 어떤 실선의 모습을 가질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 분도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귀중한 말씀해 주신 유 장관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기 포럼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HRI**

정리 및 교열

이해정 연구원 (hjlee@hri.co.kr) ☎ 02-3669-4487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E)	2008(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7.0	3.1	4.7	4.2	5.0	4.5	5.1
	최종소비지출 (%)	7.6	-0.3	0.4	3.9	4.5	4.4	4.6
	민간소비 (%)	7.9	-1.2	-0.3	3.6	4.2	4.3	4.5
	총고정자본형성 (%)	6.6	4.0	2.1	2.4	3.2	4.6	5.8
	건설투자 (%)	5.3	7.9	1.1	-0.2	-0.4	2.5	3.8
	설비투자 (%)	7.5	-1.2	3.8	5.7	7.6	7.5	8.5
대 외 통 관 래 기 준	경상수지 (억 \$)	54	119	282	150	61	-30	-50
	무역수지 (억 \$)	103	150	294	232	161	151	60
	수출 (억 \$)	1,625	1,938	2,538	2,844	3,255	3,718	4,110
	증가율 (%)	(8.0)	(19.3)	(31.0)	(12.0)	(14.4)	(14.2)	(10.5)
	수입 (억 \$)	1,521	1,788	2,245	2,612	3,094	3,567	4,050
	증가율 (%)	(7.8)	(17.6)	(25.5)	(16.4)	(18.4)	(15.3)	(13.5)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7	3.6	3.6	2.8	2.2	2.5	2.8
	실업률 (%)	3.1	3.4	3.7	3.7	3.5	3.2	3.0
금 융	원/\$ 환율 (평균 원)	1,253	1,192	1,145	1,024	955	929	915
	국고채금리 (평균 %)	5.8	4.6	4.1	4.3	4.8	5.2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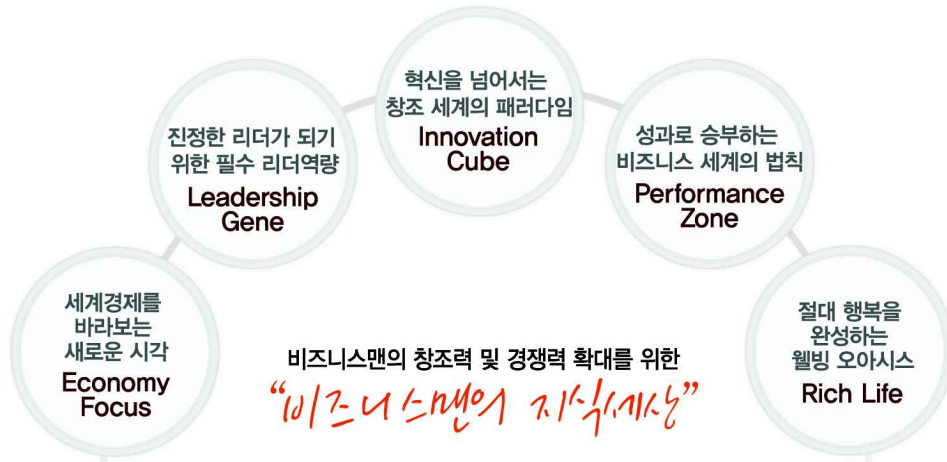
내 인생 최고의 멘토를 만나다!

Creative business contents tank, Usociety

21세기는 지식 경쟁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트렌드, 나만 뒤쳐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비즈니스맨들의 창조력 충전 및 경쟁력 확대를 위한 지식 정보 콘텐츠,
 Usociety에서 만나보세요.

비즈니스 지식 정보 TV, CreativeTV.co.kr

창조의 5분, 성공의 5분! 그 5분을 위한 다이제스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Usociety의 미션입니다.
 HD VIDEO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지혜를 나누십시오.



글로벌 비즈니스의 완성, EBS 어학 프로그램

최고의 어학 강의, EBS 어학 콘텐츠! 국내 대표 강사진들의 명 강의로 구성된 3,200편 이상의 풍부한 어학 프로그램을 Usociety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Business	Conversation	Global
영어인터뷰 START 인터뷰 영어족보 비즈니스영어 모질게 new TOEIC 비겁한 new TOEIC 外	Style English Survival English 영어 말하기 START Oxford 회화 말미잘 English 外	리듬 중국어 입문 이키이키 일본어 러시아어 첫걸음 스페인어 첫걸음 터키어 첫걸음 外

차별화된 경쟁력, Competency Tools

지식노트

경제, 사회, 문화에서 저널까지 한 눈에 보는 weekly webzine

U-Times

지식 트렌드를 손에 잡을 수 있는 콘텐츠 매거진

U-Planner

프로페셔널리즘의 시작, 웹 프랭클린 플래너

eBook

비즈니스에서 교양까지, 시간으로만 채워지는 digital library